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7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234호(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정정 ..... 3

## 훈 령

-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54호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4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9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98호 부평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1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9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3호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고시 ..... 3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4호 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3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8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 3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송도3공구 F20-1BL) .... 45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송도3공구 F25-1BL) .... 47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9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98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02호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내용변경) 예고 ..... 5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04호 공시송달 공고(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 5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05호 손실보상계획 공고(『신촌문화공원(주안교회앞) 조성사업』) ..... 6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0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7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 제469호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 71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5호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6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7호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1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8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진열품 관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1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8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1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9호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4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0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1호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71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2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8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3호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9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4호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5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6호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224

##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234호(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정정

시보 제1771호(2019. 9. 23.)에 게재된 “조례 제6234호(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7일

## 인 천 광 역 시 장

시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제3조제3항 중 “이 조례에 따라 처리”를 “이 조례를 적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 조례에 따라 처리”를 “이 조례를 적용”으로 한다.	시보 제71쪽 제10행

훈 령

##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각종행사관  
인천광역시교육감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정」 전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54호

각종 행사관련인천광역시교육감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사용  
승인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

각종 행사관련인천광역시교육감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행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교육감 소속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본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서 해당 과에서 추천하는 경우
4. 그 밖에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의 제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단체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연도 사업 계획에 포함된 행사
  - 나. 교육적 의의를 가진 인천광역시 규모의 행사
  - 다. 단체의 본부 및 시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
  - 라. 학생 등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케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 마.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 바.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
  - 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제3조(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 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
5.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
6.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7. 기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해당 과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기준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② 주최기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① 우등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행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교사, 학생 구분)
3. 우등상 수여 내역
4.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5. 행사 진행 사항
6.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등)** ① 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과는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우등상 수상자가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청에의 적용)**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b>				
주최 기관	명 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FAX: )		
	대 표 자		생년월일	
<b>행 사 개 요</b>				
행 사 명				
행 사 목 적				
행사주요내용				
행사홍보 (예정)사이트주소				
타후원에정 기관명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우등상 수여 신청 여부			매 수	
후원명칭 사용 신청 여부				
<p>「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우등상의 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기관명)대표자 000 (직인)</p>				
<p><b>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b></p>				
<b>※ 불입서류</b> 1. 요청공문 1부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여부 포함), 참가자의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야 함] 1부 3.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4.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 5.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 1부 6.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5, 6, 7번 서류 생략 가능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행사 관련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 검토의견서(제4조 관련)**

부서명 :

행 사 명					
주 최	단체명			대 표 자	
기 간					
목 적					
소 요 예 산	금 액			부 담 자	
	내 역				
신 청 사 항	우등상 수 여	상의 종류		수여대상 인 원	
	후원명칭 사용여부				

**승인 기준 검토**

검토기준	검토결과	비 고
① 행사가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		
③ 행사 주제의 적합성 및 행사 내용의 충실성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미승인)		
④ 행사 주최단체의 건전성		
⑤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정도 및 참여 자발성		
⑥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⑦ 특정 물품이나 특정 도서구입 등을 요구 또는 유도하는지 여부		
⑧ 연례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에 대한 승인사항 이행 여부		
⑨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부		

※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4, 5번 서류 생략 가능

[별지 제3호서식]

## 행사 결과 보고서(제6조 관련)

기관(단체)명 :

직인

① 행사명										
② 행사 일시						담당자	성명			
③ 행사 장소							연락처 (핸드폰)			
④ 참여 인원	교사	학생					일반인	기타	총계	
		유	초	중	고	소계				
⑤ 우등상 수여내역	소속(학교)		직	성명	생년월일	성별	표창년월일			
⑥ 행사운영비 수입 및 지출 내역										
⑦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⑧ 행사 진행 사항	[행사사진 별첨]									
⑨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수상확인서 발급 신청서(제7조 관련)

성명		연락처 (전화/핸드폰)	
생년월일			
대회(수상)명칭			
수상연도			
당시학교명			
신청용도			
신청부수	통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수상확인서 (제7조 관련)

성명(신청인)		연 락 처 (전화/핸드폰)	
소 속			
생년 월일			
주 소			
대회(수상)명칭			
대회(수상)종별			
대회(수상)수여일		상장발급번호	
용 도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개정 사항

### 1. 개정이유

- 가. 개정 전 규정 제2호(행사대상)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한정된 행사로 적용되어 우등상 시상을 포함하지 않는 단독 행사에는 후원명칭승인 적용이 불가능한 바, 이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각종행사관련인천광역시교육감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정」  
→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 대상행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표창조례」 제8조제2호 삭제

#### ○ 제8조(우등상)제2호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다.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 297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3),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0. 7.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하는 사항임

#### 2. 위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	증)24,305	24,305	-	

#####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신설내용	신설사유
①	자동차 정류장	○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신설 - 면적: 24,305㎡	○ 계양지역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추가 조성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절감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7	25 (24~53.4)	주간선 도로	6,489	광로 3-9	김포 시계	일반 도로	대2-61	'92. 5.21.	
변경	대로	3	37	25 (24~53.4)	주간선 도로	6,489	광로 3-9	김포 시계	일반 도로	대2-61	'90.12.28.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37	대로3-37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B=25m→28m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92.5.21.→'90.12.28.	○ 버스 공영차고지 진출입구 개설에 따른 가·감속차로 구간 설치 ○ 최초결정일 표기 오기로 인한 정정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98호

## 부평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83호(2008.5.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호(2010.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5호(2011.2.7.), 부평구 고시 제2014-23호(2014.3.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2호(2017.8.14.), 부평구 고시 제2017-102호(2017.12.20.), 부평구 고시 제2018-52호(2018.6.29.), 부평구 고시 제2019-11호(2019.1.24.), 부평구 고시 제2019-104호(2019.8.2.)로 정비계획 변경한 부평4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7)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07.

인 천 광 역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부평4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80,720.2	—	80,720.2	

### 3. 정비계획(변경)

####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주거지역	총 계	80,720.2	100.0	—
	준주거지역	80,720.2	100.0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 계획 시설)	계	80,720.2	100.0	
	택지	66,786.2	82.7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66,786.2	82.7	
	정비기반시설	13,934.0	17.3	
	도로	7,309.8	9.0	
	어린이공원①	4,342.9	5.4	
	경관녹지①	241.6	0.3	
	경관녹지②	139.7	0.2	
	소공원①	1,200.0	1.5	
	주차장①	(4,342.9)	—	어린이공원①과 중복결정
	주차장②	(1,200.0)	—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700.0	0.9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가) 교통시설(도로)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0	20 (20-25)	보조간선 도로	8,830 (160)	대2-51	효성동 신학대	일반 도로	-	70.2.9	-
기정	중로	2	727	15	국지 도로	226	중1-30	중1-30	일반 도로	-	인고 2008-83 (2008.5.9)	-
기정	소로	1	5	10 (8-12)	국지 도로	715	중1-30	756-371 소3-46	일반 도로	-	인고 2008-83 (2008.5.9)	-
기정	소로	3	①	4	국지 도로	34	소1-5	①호 어린이공원	일반 도로	-	-	-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 도로편입면적 : [7,309.8㎡] 개설 후 무상귀속

#### 나) 교통시설(주차장)

#####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평동 755-160일원	4,342.9	-	4,342.9	-	어린이공원① 중복결정
기정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평동 678-2 번지일원	1,200.0	-	1,200.0	-	소공원① 중복결정

※ 건축물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공원 결정조서에 따름

#### 다) 공간시설(공원)

#####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동 755-160일원	4,342.9	-	4,342.9	인고2008-83 (2008.5.9)	무상귀속 (건축물2,028㎡포함) 주차장① 중복결정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부평동678-2 번지일원	1,200.0	-	1,200.0	인부고2018-52 (2018.6.29.)	무상귀속 (건축물1,721㎡포함) 주차장② 중복결정

## 라) 공간시설(녹지)

##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 녹지	부평동 685-15일원	241.6	-	241.6	인부고2018-52 (2018.6.29.)	-
기정	②	녹지	경관 녹지	부평동 685-23일원	139.7	-	139.7	인부고2018-52 (2018.6.29.)	-

## 마)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 시설	노유자 시설	부평동 755-131일원	700	-	700	-	무상귀속 (건축물1,000㎡포함)

※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축물기부채납 연면적은 인허가 절차상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시설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하여 추가 용적률을 확보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건 축 시 설 계 획			
	구역명	면적 (㎡)	명칭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 정	부평4 재개발 정비 구역	80,720.2	획지1 (공동주택및 오피스텔)	66,786.2	아파트 및 오피스텔	20%이하	330.0%이하	139.0m이하
			획지2 (소공원/주차장)	1,200.0	공원시설 지하주차장	5%이하	300%이하	20m이하
			획지3 (사회복지시설)	700.0	어린이집	60%이하	300%이하	20m이하
			획지4 (어린이공원/주차장)	4,342.9	공원시설 지하주차장	5%이하	300%이하	20m이하
건축물용도			획지1	지정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지정 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지정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 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개방감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	주상복합 용지 (획지1) 6m  공공시설 확보용지 (획지2,3) 3m	·도시계획도로(중1-30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6m 설정 ·도시계획도로(중2-727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6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1-5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6m 설정  ·도시계획도로(중1-30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도시계획도로(소1-5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법 제30조의3제2항)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을 소형 주택으로 건립					
기준 완화 적용			○ 용적을 인센티브 적용 • 용도지역 용적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준주거지역 260%) － 기준 용적율 242.6%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율 242.6% + 공공시설부지제공 72.26% + 지하주차장 10% + 지역업체 참여 10% = 334.86% • 계획 용적율 : 330%이하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내 건축물에 필로티 조성으로 조망권과 보행권 확보</li> <li>색채, 스카이라인, 건축입면(옥탑부, 개구부)계획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 도모</li> <li>도시개성창조를 위하여 솔내음길 등 지명을 주제로 한 디자인 권장</li> <li>건축물의 색채는 단순화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 권장하며, 슈퍼그래픽은 가급적 지양</li> </ul>	
	가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차점 및 경계부에 상징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li> <li>광학산과 연계된 남측의 보행자 도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가로수와 하층식재를 보강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함</li> </ul>	
	녹지 및 오픈스페이 스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의 광학산에 대한 조망확보를 위한 시각회랑 형성</li> <li>보행 동선축은 소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축기능 확보</li> </ul>	
	간판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1층 출입구에 종합 안내판으로 설치하고 부평구에서 권장하는 색채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함</li> <li>건물 상단부의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건물명 등 1개에 한하여 허용</li> </ul>	
환경 보전 계획	녹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교목을 밀식하여 광학산 산림녹지축을 연계하고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li> </ul>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수로 변은 도로소음을 완화하도록 공공시설을 전면 배치하고 건축선을 3m, 6m 지정하여 가로환경의 쾌적성 제고</li> </ul>	
	투수성 포장재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경시설 설치 시 자연소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함</li> </ul>	
	우수의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장의 재료는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설치 및 리사이클시스템 도입 권장</li> </ul>	
	자연환경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활용하고, 도시생태 환경 보존 및 생물종다양성에 기여하도록 단지 내 녹지공간 및 수공간 최대한 확보</li> </ul>	
재난 방지 계획	재난유형별 방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 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 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li> </ul>	
	방재시설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li> </ul>	
	방재거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 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함</li> </ul>	
	안전한 토목구조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 경계부 노후불량한 옹벽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7~10m의 기존 수직옹벽구조를 계단식 사면처리로 안정화</li> </ul>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li> <li>가설방음판넬(6m) 설치</li> <li>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li> </ul>	
비산 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li> <li>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li> <li>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li> </ul>	
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li> </ul>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li> </ul>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 2.5%, 영구임대 2.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구 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규모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재개발 사업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세대수의 15%이상</li> <li>단,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세대수의 5%이상</li> <li>구청장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음</li> </ul>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재개발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이내의 범위안에 사업시행인가	•부평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sup>2</sup>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부평4 재개발 정비구역	80,720.2	381	—	—	381	—	

##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지: 도시계획도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6m 설정
-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도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시, 안전선 표시등을 설치함</li> <li>• 교통사고 발생가능지역에는 미끄럼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li> </ul>
화재 및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 준수</li> </ul>
홍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li> </ul>

##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1,849	576	1,273	1,924	-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청천1구역	재개발	75,338	20	250	94m이하	1,194세대	사업시행 인가	
청천2구역	재개발	219,328	18	292	101.5m이하	5,190세대	관리처분 인가	
청천3구역	재건축	11,019.4	21.9	233.9	81m이하/27층이하	303세대	사업시행 인가	
산곡4구역	재개발	39,381.8	21.4	247.5	72m이하	799세대	사업시행 인가	
산곡5구역	재개발	88,025.5	14.3	249.1	87m이하	1,498세대	사업시행 인가	
산곡7구역	재개발	85,395	25	240	80m이하	1,496세대	조합설립 인가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	80,720.2	획지1	부평동 665-272 일원	66,786.2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획지2	부평동 678-2 일원	1,200.0	소공원①/주차장②
		획지3	부평동 755-131 일원	700.0	사회복지시설
		획지4	부평동 755-160 일원	4,342.9	어린이공원①/주차장①
		획지5	부평동 685-15 일원	241.6	경관녹지①
		획지6	부평동 685-23 일원	139.7	경관녹지②

## 1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공임대2.5%, 영구임대2.5%)</li> <li>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m<sup>2</sup>이하의 규모로 계획</li> </ul>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반영

##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 기존수목 활용계획

- 대상지는 고밀 저층의 주거지로 활용가능한 수목이 적음. 그러나 단독주택지 정원의 일부 수고가 7m 이상 된 은행나무 등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공원조성 공사 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녹음수 및 경관수로 재활용하도록 조경계획 수립함

## 18)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변경)

(기정)

### ○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 부평4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분양분 내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 ○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부평4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잔여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도지역을 일원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을 원활하게 적용토록 함
-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202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계획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부평4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분양분 내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변경) 전문 삭제

##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변경)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 20) 관련서류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 - 299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до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0. 7.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금곡동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서구 왕길동 산51번지 일원	218,000	감)218,000	—	1998.06.12.	
폐지	87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서구 금곡동 323-10번지 일원	202,878	감)202,878	—	2010.10.18.	

####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2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폐지 — 면적: 218,000㎡→0㎡	○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 로서 연계되는 일부 도로의 집행계획이 없고 교차로 용량분석 결과 평면교차로 설치가 타당하여 폐지
87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폐지 — 면적: 202,878㎡→0㎡	○ 교차로 용량분석 결과 평면교차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어 폐지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준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3호

##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 인 천 광 역 시 장

### 가. 고시내용

#### ○ 지정내용 변경사항

연번	문화재의 명칭	수량	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소유자 (관리주체)
1	인천도호부관아 (仁川都護府官衙)	2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문학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2	부평도호부관아 (富平都護府官衙)	1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부평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 나. 지정내용 변경사유

- ‘청사’ 라는 명칭은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사용하고 있음
- ‘관사’ 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

다. 지정일자 : 시보 게시일

라.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주 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 연락처 : 전화 032-440-4032, 팩스 032-440-869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4호

## 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0. 7.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상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하리 일원
3. 사업목적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영농편의, 기계화 영농 도모
4. 사업내용(규모)

구 분	총계획	‘18년까지	‘19년계획	‘20년이후
용 수 로	L=4.515km	L=3.263km	L=1.252km	-
배 수 로	L=1.525km	L=0.540km	L=0.985km	-

5. 사 업 비 : 4,200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7년 02월 10일 ~ 2019년 12월 20일
7. 사 업 효 과 : 용·배수로 현대화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 및 영농 편의 제공
8.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9.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29)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1조(목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포함한다)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

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2. “종사자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 기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약국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의함)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특별공급을 받는 사실이 없는 경우.
2.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특별공급 신청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공급을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접수된 특별공급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확인 후 일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5. 재직증명서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7. 특별공급신청서
8. 무주택서약서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내국인]

1. 신분증
2.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3.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5.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7.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1. 외국인등록증
2. 국내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

**제7조(자격의 확인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신청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당해 건본주택 내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공고일 기준 해당기업에 장기근속(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근무)한 자
3. 공고일 기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자
4. 주민등록법상 인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자

**제9조(입주자 선정 방법)** 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1회에 한하여 선정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는 이 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① 사업주체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제출은 당첨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전매행위 등의 제한)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의 상실 등) 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매제한 기간 내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2.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②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은 본 기준으로 대체 적용한다.

&lt; 별지 제1호 서식 &gt;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     -     , 휴대폰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주소			☎(     )     -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	비 고
인천경제자유구역 ( )지구		m <sup>2</sup>	분양( ) 임대( )

## 4. 첨부서류

공통서류	내국인	외국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1. 신분증 ( )	1. 외국인등록증 ( )
2. 사업자등록증 ( )	2. 인감증명서 ( )	2. 국내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 (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 )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 )	3.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 )	
5. 재직증명서 ( )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 )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5. 주민등록표등본 ( )	
7. 특별공급신청서 ( )	(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 에 한함)	
8. 무주택서약서 ( )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7. 가족관계증명서 ( )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 해당사항에 괄호 안에 “O”으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

단지명: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블록( 동 번지)

[illegible]

&lt; 별지 제3호 서식 &gt;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단지명: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블록(      동      번지)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대상자 확인 (확정/예비)	신청주택형 (㎡)	비 고 (분양/임대)

위 신청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임이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별지 제4호 서식〉

#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통보

단지명: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블록(      동      번지)

[illegible]

&lt; 별지 제5호 서식 &gt;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성 명	(인)	신청주택형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9. .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

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 \_\_\_\_\_(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 \_\_\_\_\_(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9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79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015-3호, 2015.6.24.) 고시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6호(2019.7.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2호(2019.8.9.)호로 변경 고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번지의외 1필지 (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F20-1BL)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 10. 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 사업계획(변경) 내역

#####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F20-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성명·주소 등 (변경 없음)

가.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번지의외1필지 (변경 없음)

나. 대지면적: 19,196.26㎡ / 건축연면적: 96,570.99㎡ (변경 없음)

다. 주택의 규모 (변경 없음)

1) 공동주택 : 총 662세대 (5개동, 지하2층~ 지상37층)

· 70형 63세대, 114형 65세대, 84A형 140세대, 84B형 102세대,

84C형 102세대, 107A형 127세대, 107B형 63세대

2)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7개동  
라. 기타사항 (변경)

1) 주동 기초파일개수 변경 및 위치 조정, 지하외벽 일부구간 기초형식 변경,  
기초형식 변경에 따른 굴착단면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 08. 26. ~ 2022. 09. 11. (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 (변경 없음)

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0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78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015-5호, 2015.7.17.) 고시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7호(2019.7.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3호(2019.8.9.)호로 변경 고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4번지(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F25-1블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 10. 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 사업계획(변경) 내역

#####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F25-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성명·주소 등 (변경 없음)

가.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4번지 (변경 없음)

나. 대지면적: 16,476.1㎡ / 건축연면적: 38,507.20㎡ (변경 없음)

다. 주택의 규모 (변경 없음)

1) 공동주택 : 총 164세대 (4개동, 지하1층~ 지상19층)

· 107형: 70세대/ 121형: 36세대/ 144A형: 28세대/ 144B형: 28세대/ 195형: 2세대

2)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라. 기타사항 (변경)

1) 주동 기초파일개수 변경 및 위치 조정, 지하외벽 일부구간 기초형식 변경,  
기초형식 변경에 따른 굴착단면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 08. 26. ~ 2021. 10. 30. (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 (변경 없음)

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9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7.

**인 천 광 역 시 장****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 명칭: 강화소방서 이전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변경)
  - 당초 : 8,639㎡(공공청사: 8,187㎡, 도로: 452㎡)
  - 변경 : 8,645㎡(공공청사: 8,190㎡, 도로: 455㎡)
- 규모(변경)
  - 당초: 건축면적: 2,247.67㎡, 연면적: 6,134.51㎡, 3개동(지하1/지상3층)
  - 변경: 건축면적: 2,056.38㎡, 연면적: 4,489.07㎡, 2개동(지하1/지상3층)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강화소방서장)
- 주소: 남동구 정각로 29(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8. 31.
-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 2021.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 공공청사(강화소방서)

##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274-1	전	2,686	2,686	양*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7*-115				
2	삼성리	275-3	전	544	544	안*영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	근저당권	
3	삼성리	277-5	전	117	117	안*영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가)	근저당권	
4	삼성리	275-5	전	2,355	2,355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5	삼성리	276	전	258	258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6	삼성리	277-6	전	1,599	1,538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7	삼성리	277-3	전	661	565	최*렬	경기 김포 대곶면 거울대리 3*3				
8	삼성리	1073	구	2,435	124	국	농림축산식품부				
계				10,655	8,187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274-1	전	2,686	2,686	인천광역시					
2	삼성리	275-3	전	544	544	인천광역시					
3	삼성리	275-5	전	2,355	2,355	인천광역시					
4	삼성리	276	전	258	258	인천광역시					
5	삼성리	277-3	전	566	566	인천광역시					
6	삼성리	277-5	전	117	117	인천광역시					
7	삼성리	277-6	전	1,538	1,538	인천광역시					
8	삼성리	1073-4	구	126	126	인천광역시					
계				8,190	8,190						

## ○ 도로(소3-1호선)

##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277-3	전	661	96	최*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3*3				
2	삼성리	1073	구	2,435	151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삼성리	9-2	전	237	32	김*수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0				
4	삼성리	10-6	전	207	20	이*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1	불은농협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41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5	삼성리	10-7	전	992	92	임*자	경기 파주 교하읍 동패리 2*4				
6	삼성리	277-6	전	1,599	61	안*영 외1인	경기 김포 하성면 석평로 1*2번길13				
계				6,131	452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삼성리	9-7	전	33	33	인천광역시					
2	삼성리	10-10	전	20	20	인천광역시					
3	삼성리	10-11	전	92	92	인천광역시					
4	삼성리	277-7	전	95	95	인천광역시					
5	삼성리	277-8	전	61	61	인천광역시					
6	삼성리	1073-3	구	109	109	인천광역시					
7	삼성리	1073-6	구	45	45	인천광역시					
계				455	455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도로(소3-1호선)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최 초 결정일	공공시설 관리청 귀속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소로	3	1	7	국지도로	56	군도2호 (삼성리 8-2)	삼성리 47-3	2018. 7. 9.	강화군	

## 8.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198,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698호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8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장

가. 심의일시 : 2019. 9. 26.(목) 14: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28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20작품(조건부 2작품 포함) / 부결 : 8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t;별첨&gt;

## 2019년도 제8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연번	위치 및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 유
				가결	부결	
1	서구 원당동 검단 신도시 AB 15-1블럭	조각	Wonder Ruler	○		
2	"	조각	WAVE ON	○		
3	"	조각	발아(發芽)	○		
4	연수구 송도동 169(SM1)	조각	시간기둥 (Time Pole)	○		
5	"	조각	인사하는 사람 (Greetingman)	○		
6	"	회화	Earth		○	
7	"	회화	Moon		○	
8	연수구 송도동 171(SM3)	조각	시간기둥 (Time Pole)		○	
9	"	조각	인사하는 사람 (Greetingman)		○	
10	"	회화	Earth		○	
11	"	회화	Moon		○	
12	미추홀구 주안동 13-2, 13-37	조각	생성	○		
13	계양구 작전동 679-2	조각	생명의 변주		○	
14	서구 연희동 793-16,17번지	부조	초의선사시	○		

연번	위치 및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 유
				가결	부결	
15	연수구 송도동 8-23번지	조각	I'm fine-shining	○		
16	"	조각	열림	○		
17	"	조각	클로와 몽이의 행복한 산책	○		
18	"	미디어	시간속으로 -원더 아일랜드, -교토의 여름h1	○		
19	"	회화	Allotropism -일상의 변주	○		
20	중구 중산동 1886-4	조각	리듬	○		[조건부] ·좌대 불안정으로 크기 크게 조정 ·벽에서 떨어지게 설치
21	미추홀구 송의동 3942번지	조각	시간.공간 -그 꿈의 여정	○		
22	부평동 부평동 210-2. 210-56	조각	사랑선물+사과	○		[조건부] ·유지보존 방안 마련
23	"	회화	도시풍경 -해질녘	○		
24	"	회화	도시풍경 -퇴근길	○		
25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조각	Dream tree -꿈꾸다	○		
26	서구 청라동 96-7	조각	자연으로부터	○		
27	미추홀구 송의동 462외 2필지	조각	시간의 궤적 -꽃으로 피어나다	○		
28	"	조각	사계 -풍경속에서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02호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내용변경) 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문화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장

## 1. 예 고 일 : 시보 게재일

## 2. 예고내용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내용변경)

## ○ 명칭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0호	강화 솔정리 고씨가옥 (江華 率丁里 高氏家屋)	강화 고대섭 가옥 (江華 高大燮 家屋)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674번길 23-4

## ○ 변경사유

- 강화고려인삼 최초경작자 인 故고대섭(高大燮) 이 지은 저택으로 최초 건축주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 부터 30일

4.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번호 : 032-440-4032

○ 전송번호 : 032-440-8693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1층 문화재과

○ E-mail : yoosd99@korea.kr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04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장

### 1. 처분대상업체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330	(주)아세아트렌스	김병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42, 507호 (신흥동3가, 풍천빌딩)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6.27.)

### 2. 예정된 행정처분 :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9일 18:00 까지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 해양항만과 (송도동, 미추홀타워)

－ 담 당 자 : 해양항만과 이환빈 (032-440-4843)

###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05호

##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신촌문화공원(주안교회앞) 조성사업]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93호)된 『신촌문화공원(주안교회앞)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7.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칭: 신촌문화공원(주안교회앞) 조성사업
- 나. 사업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 중 주제공원)
- 다.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4-144번지 일원
- 라. 사업규모: 3,051㎡(금회 실시계획인가 면적)
- 마.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미추홀타워)

#### 2.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 ※ 공원조성 관련 보상비 등 확보여부 및 관련 조건변경 등에 의거 변동 가능함.
  -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다.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에 의거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의거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2019. 10. 7.(월) ~ 2019. 10. 28.(월)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4일간]

나. 열람내용: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조

다.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 공여구역계획팀 (☎ 032-440-4663)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라. 열람방법: 소유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마. 이의신청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4. 기타사항

가.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연락 바라며, 아울러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물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공여구역계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2-440-4663, 팩스: 032-440-5078,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7호

##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 토지조서 [신촌문화공원(주안교회앞) 조성사업]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현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286	3,051							
1	부평구 산곡동	294-144	잡	창고 및 사무실	534.0	534.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2	부평구 산곡동	294-145	잡	창고	973.0	973.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3	부평구 산곡동	294-154	잡	창고 및 사무실	388.0	388.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4	부평구 산곡동	294-143	잡	식당	843.0	843.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5	부평구 산곡동	390-3	도	창고 및 사무실	228.0	105.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6	부평구 산곡동	430	잡	공지	188.0	76.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7	부평구 산곡동	431	잡	공지	75.0	75.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8	부평구 산곡동	434-1	잡	공지	10.0	10.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9	부평구 산곡동	435-1	잡	공지	4.0	4.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10	부평구 산곡동	산18-1	임	사무실	43.0	43.0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방부				

## □ 물건조서 [신촌문화공원(주안교회앞) 조성사업]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원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부평구 산곡동	294-145	잡	창고 및 사무실	철재	79.6	79.6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중앙철강
2	부평구 산곡동	294-145	잡	창고 및 사무실	목재, 철재	128.4	128.4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목공창고
3	부평구 산곡동	294-154	잡	창고 및 사무실	철재	292.2	292.2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형제 자동차 공업사
4	부평구 산곡동	294-143	잡	식당	목재, 철재	410.4	346.6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민물장어 구이

##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명칭		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앞) 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주 소	우)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7호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송○○,고○○
	주 소	-

##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145	창고 및 사무실	철재	4개소 (7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인)

물건소유자 송○○,고○○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명칭		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앞) 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주 소	우)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7호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지○○
	주 소	-

##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145	창고 및 사무실	목재, 철재	3개소 (12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인)

물건소유자 지○○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명칭		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앞) 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주 소	우)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7호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김○○
	주 소	-

##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145	창고 및 사무실	철재	8개소 (29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인)

물건소유자 김 ○○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명칭		신촌공원(주안장로교회앞) 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주 소	우)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7호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문○○
	주 소	-

##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143	식당	목재, 철재	3개소 (346.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부대이전개발과장) (인)

물건소유자 문 ○○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연 락 처	
이 의 신 청 대 상 토 지 , 물 건		
이의신청의 이유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장 귀하</p>		
구비서류	물건소유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 음

## &lt;&lt; 감정평가업자 추천동의서 &gt;&gt;

□ 사업명: 신촌공원(주안교회앞) 조성사업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0/0)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추천 감정평가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전화)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1706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주식회사 현민종합건설	2019. 10. 2.	인천190001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6번길 7, 2층	전문인력 미충원	

2019년 10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발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 제정 이유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다. 시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라. 상담사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마. 악성·강성 민원의 유형과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제6조)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예규 제 469 호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상담사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한다.
2. “상담업무”란 전화·인터넷, 문자, SNS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상담사”란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이라 한다)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민원인”이란 콜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5. “악성민원”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민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담사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사 보호 조치)** 콜센터의 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 심리상담
3.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상담사를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절차 마련
4. 악성·강성민원을 응대한 상담사에게 휴게시간 부여가능
5.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담사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 마련
6.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 나. 상담사가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 다.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악성·강성 민원의 유형) 악성·강성 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악성·강성 민원 처리 기준) 상담사가 수행하는 악성·강성 민원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사가 악성·강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악성·강성 민원 유형(제5조 관련)

## 《악성민원》

## 1. 성희롱

상당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 2.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 하는 경우

## 《강성민원》

## 3. 민원요지불명

콜센터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 이어서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 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려 요지파악이 어려운 통화
- 나. 본인의 정치적 성향·종교·지식 등을 상담사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통화

## 4. 반복·억지 민원

- 가.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 나. 콜센터 상담업무를 벗어났거나 더 이상 민원처리가 불가함에도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
  - 1) 콜센터 상담업무(시본청 및 경제청, 사업소, 통합군·구를 제외한 유관기관, 타기관 업무는 대표번호만 안내, 미통합군·구는 부서(팀) 전화번호 안내)가 아님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제기
  - 2) 공무원 응대태도 불만에 대해 민원처리 방안을 안내하였으나 콜센터에서 처리할 것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 3) 콜센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담을 강요하며 상담사 응대에 꼬투리를 잡으며 불만제기

## 5. 장시간 통화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하고, 20분 이상 성실하게 상담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이 납득하지 않아 상담사가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연결이 어려운 공공기관 및 부서 전화연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상담사의 말꼬리를 잡으며 장시간 통화 지속

나.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였으나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려하지 않고 장시간 통화지속

## 6. 상습 강요 민원

가. 인입되자마자 민원인에게 무조건 전화를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부서 또는 담당상담사 등을 연결해 달라고 3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

나. 민원내용 없이 특정 부서, 상담사, 상담사(팀장) 연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 명확한 민원내용 없이 특정 부서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행위

## [별표 2]

악성·강성 민원 처리 기준(제6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차단기간 중 해당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전화상담 통화를 요청할 경우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음성안내 방식으로 응대한다.
- 나. 이용 정지 기간 중 민원인이 문자, SNS 상담을 통해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문자로 통보한다.

## 2. 개별기준

## 가. 성희롱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성희롱 중지 경고	① 1차 법적조치 경고 후 IVR 응대종료 ② 팀장보고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	팀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	상담사
4단계	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	재발 시 24시간 반복 이용 정지 및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의장

※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 음성 자동 응답

※ APP(Application) : 상담사가 상담업무(전화받기, 전화걸기, 상담지식 검색, 상담이력 조회 및 저장 등)를 유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

## 나. 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언어폭력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및 팀장보고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및 IVR 응대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상담APP 악성민원등록	팀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 (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	상담사
4단계	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	월간 이용 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의장

## 다. 민원요지불명,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3차 경고 및 IVR 응대 종료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	팀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 (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	상담사

## 라. 상습 강요 민원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① 매월 2회까지 민원 요청사항 응대 및 경고 ② 3회차 요청시 경고 및 IVR 응대 종료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	팀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	상담사

## [별표 3]

악성·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제6조 관련)

## 1. 성희롱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성희롱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IVR전환) ② 팀장 보고	<1차 경고> "시민님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 멘트 구사 후 IVR 전환  <IVR 경고멘트 자동송출> "시민님의 말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발 시에도 24시간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악성민원 등록(성희롱)	팀장 콜센터의장
3-1단계	이용 정지	① 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 ②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의장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4단계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의장

※ 재발시 24시간 반복정지 및 법적 고소·고발 검토

## 2. 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언어폭력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및 팀장보고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및 IVR 응대	<1차 경고> "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차 경고> "언어폭력이 지속되어 더 이상 상담이 어려워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 멘트 구사 후 IVR 전환  <IVR 경고멘트 자동송출> "시민님의 말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라 언어폭력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① 상담사 상담 후 팀장 보고 ②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언어폭력)	팀장
3-1단계	이용 정지	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4단계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의장

※ 이용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법적 고소·고발 검토

## 3. 민원요지불명,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후 종료 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 및 IVR 응대	<p>&lt;1차 경고&gt;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lt;2차 경고&gt;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lt;3차 경고&gt;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 니다.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 멘트 구사 후 IVR 전환</p> <p>&lt;IVR 경고멘트 자동송출&gt;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p>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① 상담사 상담 후 팀장 보고 ②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강성민원 등록(민원요지불명)	강성민원 등록 시, 동일번호 24시간 이용정지	팀장
3-1단계	이용 정지	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 <IVR 연결불가 멘트 자동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 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 ※ 재발 시 반복 이용정지

## 4. 상습 강요 민원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① 1차 민원응대 및 경고 ② 2차 민원응대 및 경고 ③ 3차 경고(IVR 전환) → 응대 횟수 제한 : 월 2회	<p>&lt;1차 인입&gt; "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내용 없이 전화(연결) 요청하시는 경우 이후 상 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p> <p>&lt;2차 인입&gt; "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내용 없이 전화(연결)요청하시는 경우 이후 상 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p> <p>&lt;3차 인입&gt; "문의내용 없이 일방적인 요구로 상담이 불가합니 다. 통화 종료 하겠습니다." → 멘트 구사 및 팀장 보고 후 IVR 전환</p> <p>&lt;IVR 경고멘트 자동송출&gt; 명확한 문의내용 없이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시민 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p>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강성 민원 등록(상습강요민원)	강성민원 등록 시, 동일번호 24시간 이용정지	팀장
3-1단계	이용 정지	IVR 연결불가 멘트송출 <IVR 연결불가 멘트 자동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 ※ 재발 시 반복 이용정지



## &lt; 문자 민원 상담(민원요지 불명) 시 &gt;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후 종료	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 및 최종 문자발송 응대 후 종료	<p>&lt;1차 경고&gt;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lt;2차 경고&gt;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lt;3차 경고&gt;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 문자 발송 후 종료</p> <p>&lt;경고문자 수동 송출&gt;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p>	상담사 (문자)
2단계	강성민원 등록	① 상담사 상담 후 팀장 보고 ② 팀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강성민원 등록(민원요지불명)	강성민원 등록 시, 동일번호 24시간 이용정지	팀장
3-1단계	이용 정지	연결불가 문자 수동 발송	<연결불가 문자 수동 발송>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 문자, SNS 등 민원 재발 시 전화민원 응대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반복 이용정지

## 5. 이용정지 기간 중 문자, SNS를 통한 상담 또는 아웃콜 요청 시

- 전화민원 응대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이용정지 및 제한 응대멘트 송출

"민원콜센터 입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5호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책개선 중심의 “특정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으로 현안사업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시 중·장기적 전략방향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자체평가” 과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정평가에 대한 정의 등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추가, 보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2조)
- 나. 부서 소관사항이 아닌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제8조)

- 다. 성과관리 측면의 평가제도 강화를 위하여 성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체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업무평가 과정을 구체화(안 제9조~제10조)
- 라. 새롭게 도입된 특정평가 계획의 수립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관평가와 합동평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안 제12조~제13조)
- 마. 기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안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평가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115, 팩스 032-440-8630, 전자메일 : victual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평가”란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정평가”란 시장이 주요 정책 등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9조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시정 주요 정책 등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종합·조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성과를 제9조의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평가대상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소관 정책 등의 효과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특정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평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연구”를 “평가업무의 일부”로 한다.

①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부의”를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하고, “안전심사 수당 및 일비와 여비”를 “수당 및 여비”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업무"라 함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이하 "소속 행정기관" 이라 한다),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군·구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삭 제>
2. "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평가"란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제6호에 따른 성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p>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p> <p>6. (생략)</p> <p>7. "투자기관"이라 함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p> <p>8. "출연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p>	<p>5. "특정평가"란 시장이 주요 정책 등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7.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p> <p>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p> <p>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p> <p>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p> <p>&lt;삭제&gt;</p>
<p>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9조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시정 주요 정책 등이 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생략)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지방공공기관을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7조 <삭 제>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p>제8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p> <p>① <u>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u></p> <p>1. <u>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u></p> <p>2. <u>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u></p> <p>3. <u>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u></p> <p>② <u>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u></p>	<p>제8조 &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u>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u></p>	<p>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u>시장은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u>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u></p> <p>④ <u>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u></p> <p>⑤ <u>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p> <p>⑥ <u>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종합·조정한다.</u></p>
<p>제10조 (자체평가) ① <u>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u></p>	<p>제10조(자체평가) ① <u>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성과를 제9조의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u></p>

현행	개정안
<p><u>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u></p> <p><u>⑤ 시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p>	<p><u>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평가대상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u></p> <p><u>⑤ 시장은 소관 정책 등의 효과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⑥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제12조 (기관평가) ①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u></p>	<p><u>제12조(특정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평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u>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13조 (합동평가) 시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u>1.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p> <p><u>2.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u></p> <p><u>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u></p> <p><u>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u></p> <p><u>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u></p> <p><u>② 시장은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p> <p>① 시장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p> <p><u>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② -----  <u>평가업무의 일부를</u> -----  -----  -----.</p>
<p>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시장공약 추진상황의 자문 및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p> <p>5. (생략)</p>	<p>제20조 (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p>제23조 (회의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u>부</u>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23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회의에</u>  <u>부치는</u>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27조 (수당 등) 평가위원이 평가 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전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 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심사 수당 및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 ----- ----- 「인천 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 수당 및 여비를 -----.



## [ 관련법령 검토 ]

관계 법령	<p>□ 「정부업무평가 기본법」</p> <p>○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6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규칙 제3017호, 2017.1.13. 공포, 2017.2.6. 시행)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조례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시립박물관 관람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기획전 등의 유료 관람이 필요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부모 가족과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 사항 추가 삽입(안 제6조)

나. 반려견 등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는 박물관 관람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되,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 규정으로 둬(안 제8조)

다. 제15조와 관련한 시설사용료에 “인천도시역사관”의 사용허가 시설과 사용료를 추가로 삽입하되,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박물관의 시설사용기준과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미포함으로 표시하여 명확히 함  
(안 제11조 제3항,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라.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으로 규정된 심의사항으로 변경하여 시행(안 제24조)

마.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위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임(안 제29조 제4항, 안 제31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립박물관 관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옥련동, 인천시립박물관 관리부)

(2) 연락처 : ☎ 032-440-6713, FAX 032-440-8871

####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관립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람·매표시간)”을 “(관람·입장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매표”를 각각 “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2조제1항 중 “시설의”를 “제11조제3항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유물관리과장”을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9조제4항 중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을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별표 1】

## 시 설 사 용 료 (제15조 관련)

##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VAT별도)	비 고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50,000	
	영상실(석남홀)	4시간	40,000	
	우현마당	1일	30,000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 당	4시간	20,000	
	정 원	1일	35,000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20,000	
	전시용 슬로프	1일	1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당	4시간	30,000	
<u>인천도시역사관</u>	<u>기획전시실</u>	<u>1일</u>	<u>40,000</u>	
	<u>강 당</u>	<u>4시간</u>	<u>40,000</u>	

## ※ 사용료 계산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미 포함 가격 임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야간(18시 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는 <u>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u>	제2조(적용의 범위)----- ----- <u>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u>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 3. (생략)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입장시간) ①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2. 입장시간-----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1.~8. (생략)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 ----- ----- 1.~8. (현행과 같음)

## &lt;신 설&gt;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제8조(관람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 2. (생략)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lt;신 설&gt;

## &lt;신 설&gt;

제11조(대관의 허가과 범위)

- ① (생략)  
② (생략)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11..(현행 9호와 같음)  
12..(현행 10호와 같음)  
13..(현행 11호와 같음)

제8조(관람금지) -----  
-----  
-----.

1. · 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대관의 허가과 범위)

-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③ (생략)

1.~4. (생략)

## &lt;신설&gt;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회 구성)

①~④ (생략)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과장이 된다.

##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 ③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2조(사용시간)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회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협력에 관한 사항

## 5. (생략)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③ (생략)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생략)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  
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  
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  
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12조(설립과 운영)</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내용은 별지 작성”</div>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현행)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현행)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7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컴팩스마트시티”의 명칭이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변경되고, 그 외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립박물관 관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옥련동, 인천시립박물관 관리부)

(2) 연락처 : ☎ 032-440-6713, FAX 032-440-8871

#### 5.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제사항

관련법령	<p><input type="checkbox"/>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p> <p>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8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진열품 관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람 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진열품 관람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열품 관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내부지침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진열품 관람 규칙을 폐지함.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립박물관 관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옥련동, 인천시립박물관 관리부)

(2) 연락처 : ☎ 032-440-6713, FAX 032-440-8871

#### 5.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진열품 관람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진열품 관람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p><input type="checkbox"/>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p> <p>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7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및 운용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7.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 가. 2019년 9월 16일자로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모든 공사채 발행이 전자등록 증권으로 전환됨에 따른 상위법 개정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 나.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금액에서 200만원(1대)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나, 시민편익 관점에서 지속 시행 필요성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근거법률로서 「공사채등록법」을 삭제하고, 그 대체 법률로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하며, 용어 역시 ‘등록’에서 ‘전자등록’으로 변경함  
(안 제8조제1항, 안 제12조)

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일부감면(200만원/대)의 시한을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을 연장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2021년 12월 31일까지), 채권감면 혜택을 시민들에게 지속 제공하기로 함  
(안 별표2 제2호 자목)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전화 440-1664, 팩스 440-8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2019년 9월 16일자로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모든 공사채 발행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어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함.

나.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금액에서 200만원(1대)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금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중인바, 현행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에 부응하고 시민편익을 지속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규정에서 「공사채등록법」을 삭제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용어 역시 ‘등록’에서 ‘전자등록’으로 변경

(안 제8조제1항, 안 제12조)

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금액 일부감면 정책(현행 200만원/대)의 감면시한을 현행(2019년 12월 31일까지)보다 연장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

(안 별표2 제2호 자목)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조제1항 중 “지역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를, “지역개발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로 한다.

조례 제12조 중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를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업무”로 한다.

또한, 조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조례 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p> <p>(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p> <p>(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마. 각종 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li> <li>○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li> </ul> <p>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p> <p>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p> <p>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p> <p>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p> <p>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b>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다</b></p>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p>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 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 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p> <p>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p>	

## 신·구조문대비표

### □ 조례 본문

#### ○ 제8조 제1항, 제12조

현 행	개 정(안)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 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 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 ----- 전자등록업무, ----- -----.

### □ 조례 별표2

#### ○ 제2호 자목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제10조관련)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제10조관련)	
구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구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2 매입 면제 대상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금 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개발채권의 매입 금 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u>감면시한은 2019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u>	2 매입 면제 대상	자. ----- ----- ----- ----- ----- ----- ----- ----- -----, <u>감면시한은 「지방세특별 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u>

##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관계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2019. 9. 1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승인,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된 공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등록기관으로서 공사채를 등록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관계법령	<p>□ 지방세특례제한법</p> <p>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lt;개정 2018. 12. 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li> <li>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li> <li>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li> </ol>
관련법규 정비대상	<p>□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p> <p>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관련자료	<p>「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별도 첨부</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공사채등록법」 폐지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임에 따라 비용 발생 없음
- 또한,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의 구매시 현재 제공하는 지역개발 채권 매입 감면사항(200만원 감면/1대)을 현행 감면시한 이후로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사항임에 따라 역시 별도의 조치비용 없음.

### 4. 작성자

재정기획관실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8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 월 1 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법적·내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추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제2조)

나. 조문으로 규정하여도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제3조, 제6조)

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문 수정(제9조, 제12조)

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제13~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업 증설”을 “컨택센터 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기업이”를 “컨택센터에”로 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기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전의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 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을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기업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의 사업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 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 증설”이란 시 관할구역에서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본 조례 제정 이후 상시고용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컨택센터 증설”----- ----- ----- -----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 컨택센터 에 ----- ----- -----.

제3조(컨택센터 운영 등) 시와 시  
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컨택센터는 비영리법  
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5조 (생 략)

제6조(공유재산 사용) ① 컨택센  
터 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하  
여는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  
는 기관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 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8조 (생 략)

제9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  
기업을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  
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위탁업체  
와 수탁업체 중 실제 투자한 기  
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보조

<삭 제>

제3조·제4조 (현행 제4조 및 제5  
조와 같음)

<삭 제>

제5조·제6조 (현행 제7조 및 제8  
조와 같음)

제7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  
-----  
-----  
----- 기업  
으로 한다.

② -----  
-----  
----- 단, 보조



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증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생 략)

② 보조금 지원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결정한다.

③ (생 략)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

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9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0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은 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생 략)

제11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생략

<삭 제>

제12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장 김 기 학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69호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 월 1 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품질 쌀의 생산 및 이용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 2. 주요내용

가.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구축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나. 종합대책위원회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관련 조사·연구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2조)

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제1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 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함량 6.5%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정업무담당 본부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농정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농정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고품질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 대규모급식시설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타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체사항)

## 관계법령 발체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li> <li>-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li> <li>-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li> </ul>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

###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법률

### 시행령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소비촉진 종합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4조(종합대책위원회)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8조(회의)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전심사 비용

#### 나. 추계 결과

- 위원회 회의참석수당(2시간 기준)
  - \* 산출내역 : 70,000원 × 6명 = 420천원
- 위원회 안전 심사수당
  - \* 산출내역 : 50,000원 × 6명 = 3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3조(수당)에 근거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달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한 태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소계						
세출		720	720	720	720	720	3,600
	소계	720	720	720	720	720	3,6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20	720	720	720	720	3,600
	일반회계	720	720	720	720	720	3,6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0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 월 1 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가.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나. 그 밖에 「축산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 등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축산업 및 인천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인천한우의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한우농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낙농도우미”란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착유와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천한우”란 “인천시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4. “인천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후대 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5. “인천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cm<sup>2</sup>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이상, 육량등급 B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인천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란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인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인천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인천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인천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시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천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인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인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
5. 인천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인천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단체의 구성
7.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농가 경영안정 및 인천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목장 악취(냄새)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 만들기 사업
2. 젓소 사육농가 복지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천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 및 혈통 보전
3. 인천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에 필요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5.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6. 조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
7. 인천한우 가격 안정 및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 촉진 등 홍보
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원 절차 및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인천시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인천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을 위해 당대·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기반 조성) 시장과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1조(품질의 개선) 시장은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개최) 시장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농가교육)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시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p><input type="checkbox"/> 축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li> <li>-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li> <li>- 제32조(송아지 생산안정사업)</li> </ul> <p><input type="checkbox"/> 축산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대상)</li> </ul> <p><input type="checkbox"/> 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

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 · 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 ·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 ☐ 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한우·젖소

가. "당대검정"이라 함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선대 기록,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대검정"이라 함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다. "검정소후대검정"이라 함은 한우 검정기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농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후보씨수소"라 함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당대검정 등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마. "보증씨수소"라 함은 종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한다.

바. "당대검정우"라 함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 대상으로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사. "후대검정우"라 함은 후보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를 또는 검정딸소를 말한다.

아. "씨암소"라 함은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암소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자. "교배암소"라 함은 혈통이 등록된 암소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차. "번식능력검정"이라 함은 암소의 초종부일,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분만난이도, 인공수정 기록, 기타 번식형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카. "유우군능력검정"이라 함은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젖소검정소"라 함은 검정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의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는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파. "검정동기군"이라 함은 같은 장소에서 검정을 함께 받는 일정 집단을 말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운영 및 비용 지원(안 제7조제2항)
-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회 개최(안 제12조)
-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시설·번식관리 등의 교육 추진(안 제13조)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연도별 소요예산(사업비)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1.5%) 반영하여 산정
- 인천한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발생으로 비용추계 실시 (안 제7조)
- 인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회 개최로 비용추계 실시 (안 제12조)



-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시설·번식관리 등의 교육 추진으로 비용추계 실시 (안 제13조)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2020년 기준 1,744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8,98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출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707.3	717.9	728.7	739.6	750.6	3,644.1
	회의개최	0.2	0.2	0.2	0.2	0.2	1
	농가교육	0.8	0.8	0.8	0.8	0.8	4
	소계	708.3	718.9	729.7	740.6	751.6	3,649.1
재원 조달							
시비	소 계	708.3	718.9	729.7	740.6	751.6	3,649.1
	일반회계	708.3	718.9	729.7	740.6	751.6	3,649.1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707.3	717.9	728.7	739.6	750.6	3,644.1
민 간		328.4	333.3	338.2	343.4	348.5	1,691.8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1호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 월 1 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사회 전반의 로봇 활용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 나.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안 제13조)
-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안 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로봇산업”이란 제1호에 의한 로봇과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법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의한 로봇산업을 말한다.
4.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육성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로봇랜드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3.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기업의 지원 및 로봇랜드 조성 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를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5.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이 제1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기업, 로봇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div data-bbox="435 640 1008 685"><input type="checkbox"/>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div> <div data-bbox="703 840 1121 887">“세부내용 별지 작성”</div>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발췌사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란 제28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이 제1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기업, 로봇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인천시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19.8)」의 연도별 소요예산 계획에 근거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비용 추정 금액임(인천 로봇랜드 민간투자비 제외)
-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 로봇 생태계 조성
    - 인천로봇랜드 조성, 로봇산업진흥시설 활성화, 로봇 시험·인증지원센터 설치
  - 로봇기업 혁신성장
    - 로봇-Start up 육성, 로봇기업 혁신성장 지원, 로봇 스타기업 육성
  -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문화 확산
    - 로봇캐릭터 및 콘텐츠 개발, 시민참여 로봇대회 개최, 로봇 꿈나무 발굴
  - 특화로봇 수요창출
    - 특화로봇 육성, 공공 서비스로봇 지원, 중소기업 협동로봇 도입 지원
  - 로봇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 로봇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 로봇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자문단 운영 등

나. 추계 결과 : 82,520,000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82,520,000	7,620,000	12,000,000	21,400,000	23,900,000	17,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 국비사업 공모 조달(미확정)
- 시비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확보(예정)
- 군·구비 : 군·구 매칭사업 조달(미확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소계						
세출	로봇산업 육성	7,620,000	12,000,000	21,400,000	23,900,000	17,600,000	82,520,000
	소계	7,620,000	12,000,000	21,400,000	23,900,000	17,600,000	82,520,000
채원 조달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군·구비	국비 시비 군·구비	국비 시비 군·구비	국비 시비 군·구비	
국 비		1,000,000	3,200,000	11,400,000	5,600,000	5,800,000	27,000,000
시비	소 계	6,620,000	8,600,000	9,800,000	18,100,000	11,600,000	54,72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00,000
민 간							
기 타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2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 월 1 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규정(안 제4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민관협의회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6조)
- 상담 및 구제 체계 규정(안 제7조)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
2.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헌법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기본법 <input type="checkbox"/> 근로기준법  <p>“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해당사항 없음”</p>
특이사항	<p>“해당사항 없음”</p>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 제10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유사조례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남)의 사례 적용

#### 나. 추계 결과

구 분	예 산(천원)	비 고
합 계	272,500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보호	62,000	지자체별 사업규모에 따라 상이, 직접 또는 위탁 수행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32,000	서울시(2019) 홍보예산 참조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운영	178,500	우리시 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 적용 (4명, 2019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타 지자체 모두 시비 투입)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인권과장 임현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년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계 (2020-2022)
세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보호	62,000	63,000	64,000	65,000	192,000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사업	32,000	33,000	34,000	35,000	102,000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운영	178,500	185,000	191,000	198,000	574,000
	소계	272,500	281,000	289,000	298,000	868,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272,500	281,000	289,000	298,000	868,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연도별 증액비율 : 3% 내외

- 2018 임금상승율 4%, 소비자물가상승율 1.5% 적용
- 인권센터(인건비 80%, 물건비 20%) 적용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3호

##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바둑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해 명시(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하고,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2. 인천광역시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 개발 사업
3. 인천광역시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사업
4. 인천광역시민을 위한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
2.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타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p><input type="checkbox"/> 바둑 진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li> <li>○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li> <li>○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li> <li>○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li> </ul> <p>“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p>“해당 사항 없음”</p>
특이 사항	<p>“없음”</p>

## 관계법령 발췌

### □ 바둑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 기존시설로 활용 가능하며, 바둑전용경기장의 정식 규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산정 불가
- (제6조) 지원
  - 현재 인천시장배 바둑대회 개최 시 보조금 24,600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 완 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4호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의 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다.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라. 1회용품 사용 저감 업소 선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 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 -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인천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체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해당사항 없음”</p>
특이사항	<p>“해당사항 없음”</p>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별표 1]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5호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추가 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지원대상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군·구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1회)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 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9-02-20>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02-20>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2-20]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본조신설 2019-02-20]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79,400천원

## ○ 보훈명예수당 : 연간 79,200천원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 현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월3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중임.

월2만원 증액에 따른 차액 필요(330명×20천원×12월)

## ○ 사망위로금 : 200천원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

※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는 1명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복지국 보훈과장 우성훈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6호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마.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바.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 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구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관계법령 발췌와 검토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 관계법령 발제사항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에 상관 없이 인천광역시

시 관내에 혼자 거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적 접촉빈도 등이 특히 취약하여 고독사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추진(안 제5조)
  -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폭염저감조치 사업
  -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2. 비용 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폭염저감시설 확충 예산 1,000,000천원 편성
  - 시비/군·구비 매칭사업(시비 500,000천원, 군·구비 500,000천원)
- 2020년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지원 예산 700,000천원 편성
  -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600,000천원(시 재난관리기금)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00,000천원(시 재해구호기금)

※ 2020년 예산 편성액(1,700,000천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8,50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기금) : 6,00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5,500,000천원, 재해구호기금 500,000천원
- 군·구비 : 2,500,0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전익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해	당	없	음	
	소계						
세출	폭염저감시설 (쿨루프 포함) 확충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지원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소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재원 조달			해	당	없	음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군·구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